

FTA 최근 동향



01 관세청 주요 이슈*

2015.05.22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

관세청은 지난 5월 21일(수)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대(對) 아세안 관세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05년 7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된 이 회의는 역내 무역의 원활화와 교역의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 등 관세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對) 아세안 협력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양 측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의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 및 한국과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위한 적극 협력도 진행된다.



◀ 지난 5월 21일(수)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이돈현 관세청차장이 대(對) 아세안 관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관세청

* 자료 : 관세청

이 밖에도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인정된 관세행정 시스템(UNI-PASS), 전자
상거래물품 통관정책 등 선진 통관시스템과 세관직원 능력배양 및 개도국
고위직 장학 프로그램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앞으로도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2대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관세외교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역내 무역의 원활화와 교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5.05.27

대중(對中) 수출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중국 FTA 전용 홈페이지 '차이나-Info'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대중(對中) 관세특화정보를 지난 6월 1일부터 제공하였다.

한-중 FTA 가서명 직후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 내에 구축한 '차이나-
Info'의 콘텐츠를 4개의 메뉴에서 20개의 메뉴로 대폭 보강하고, 별도의
홈페이지로 분리하여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한, 온라인 상담창구에서는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지역별 공익관세사가 FTA
활용을 위한 실시간 밀착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특히 대(對) 중국 FTA 전용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4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 설문조사 결과('14.4.18~29) 대(對) 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많고, FTA 활용에 있어 정보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 FTA 활용애로: 정보부족(20,3%), 원산지관리 어려움(14,4%), 전문인력 부족(11,4%) 등

차이나-Info는 다음과 같이 '한-중 FTA 협정', '활용정보', '동향정보',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차이나-Info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차이나-Info 홈페이지 메뉴 설명

한-중 FTA 협정	활용정보	동향정보	자료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문과 단계별 양허유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등 한-중 FTA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세율(중국 관세율),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제공 FTA 성공사례를 산업·품목별, 비즈니스모델별로 분류하여 성공 사례를 기업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FTA 관련 보도자료 및 동영상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보, 관련통계 및 'CEO REPORT' 등을 제공 'Q&A'를 통해 한-중 FTA 100문 100답 열람 및 YES FTA 차이나센터 상담이 가능

2015.06.01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정품목 및 서류 확대

관세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우리 농수축산물의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해주는 서류 및 품목을 대폭 확대·고시하였다.

올해 3월 5일부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이 협의를 거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3종, 481개 품목에 대해 농관원 발급서류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간편하게 인정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여기에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추가하고, 인정품목 수도 대폭 확대(HS 6단위 기준, 481개 → 1,027개 품목)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 농수축산물 등의 수출지원을 확대하였다.

FTA 원산지 인정서류 및 품목수 확대

구분	과거(3,15~)		현행(6.1~)	
인정서류	3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4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		지리적 표시 등록증
인정품목	481	녹차, 사과 등	1,027	청양고추, 나주배 등
수해농가	17만 가구		30만 가구	

이번 조치로, 지리적표시대상인 지역명품특산품(예 : 나주배, 청양고추 등)의 FTA체결 국가로의 해외진출이 쉬워지고, 특히, 한-중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의 중국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었으나, 이번 고시로 30여만 개의 농가가 지리적표시 등 서류 1개만으로 FTA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산물 및 축산물 등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5.06.05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10대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대비해 대(對) 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FTA에 특화된 ‘10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관세청이 개발하였다.

이 자료는 우선, ‘개성공단 활용 모델’부터 ‘YES FTA 차이나센터 활용 모델’까지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5대 산업별(농수산물, 석유화학, 섬유 의류, 전기전자, 생활산업)로 특정 모델 적용이 가능하도록 활용 체계도 제시되어 있다.

또한, 모델별로 한-중 FTA에 대한 ‘활용 예시’ 및 ‘적용 팁’을 제시하여 중소기업들이 FTA 발효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한-중 FTA 특화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차이나-Info’에 등재하고 기업들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며, 전국 30개 세관의 한-중 FTA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상담 직원 및 공익관세사에게 배포해, 한-중 FTA 상담 시 기업별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안내해 줄 계획이다.

2015.06.10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세관 황남재 FTA1과장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관세청 제공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은 한국의 유일한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검증 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기업들의 원산지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업종별·

결정기준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및 발급절차를 설명함으로써 원산지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FTA를 활용한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 또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 기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2015.06.11

관세청,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및 위상 강화

김낙희 관세청장은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73차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정책위원회 및 제123/124차 총회'에 참석하여 179개 회원국 관세청장들과 세계 관세행정 of 주요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극적으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이행지원 방안과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한 대응방안 등 지난 1년간 WCO에서 중점 추진해 온 정책들을 논의했다.



◀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3차 WCO 정책위원회 및 제123/124차 총회'에서 김낙희 관세청장이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 관세청 제공

또한, 이번 협정문 체결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전자상거래 등 전 세계 관세 행정의 주요이슈를 주도하는 한편, 스페인어 랭귀지펀드에 이어 아랍어를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중남미 지역의 스페인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 등 아랍 지역 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06.17

섬유·의류 업계, 더 철저히 원산지 관리해야 피해 예방

최근 섬유·의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비정상적으로 발급되어 FTA를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등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지난 6월 17일(수) 서울 섬유센터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섬유·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섬유업계의 원산지관리 정상화와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원산지검증 대응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분석하며 기업들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찾아보는 '모의검증'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동안의 원산지검증 사례를 통해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주요 요청 사유와 원산지검증 대응 실패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상대국은 주로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로 인해 사후검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수출기업들은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소홀, 원산지검증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후검증 대응에 실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오류 사례

구분	내용
한-EU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다른 경우
한-터키, 한-EFTA	수출자의 서명 누락, 원산지문구 오타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인장이 사전 통보한 인장과 다르거나, 원산지 증명서와 송품장간 금액 또는 수량이 상이 등

관세청 관계자는 "FTA 무역체제에서는 원산지의 입증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재료 구매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국이나 터키 수출 섬유류 제품 중 원산지결정기준이 원사(原絲)부터 한국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원사기준'인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특별히 주의하여,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15.06.19

무역 교과과정에 '원산지관리 실무' 편입 추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원산지관리' 분야를 신설해, 무역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교 학생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FTA 원산지관리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는 현재 원산지관리 교육은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론 위주의 단기 교육(2~3일)으로 진행되고 있고, 원산지실무에 대한 표준화된 교재도 없어 실무자에 필요한 필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역관련 특성화고·전문대의 FTA 교육 과정은 대부분 방과 후 또는 방학특강 형식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분류체계 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NCS 내에 '원산지관리' 분야를 신설(6. 1. 확정)했고, 하반기부터 분야별(현장, 교육, 자격) 전문가들과 함께 워킹그룹(Working Group)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NCS 개발 및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또, FTA 원산지 분야 전문자격인 원산지관리사 등 자격제도와 교육 과정을 연계하여 실무 중심의 FTA 교육을 받은 전문인재들이 자격증 취득 후 기업 고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관리 실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그동안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교과 과정에 원산지관리 실무가 포함될 경우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FTA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FTA 활용률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 무역·유통관리(소분류) 내에 원산지관리(세분류) 신설(6.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설 사유
02. 경영·회계·사무	4. 생산·품질관리	3. 무역·유통관리	03. 원산지 관리	기업의 FTA 활용 필수직무

-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NCS로 개발·분류 추진

2015.06.22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대비 100일간 특별지원 성과

관세청은 한-중 FTA의 가서명(2월 25일) 직후 지난 3월 2일에서 6월 10일까지(100일간) 실시한 '한-중 FTA 발효 대비 1단계 100일 특별지원'을 완료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1단계 특별지원은 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①활용지원 체계 구축', '②활용인프라 확대', '③활용안내 홍보 강화' 등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 기간 중 전국 30개 세관에 '차이나센터'를 열어 총 12,940여 개의 대(對)중국 수출기업에게 FTA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원산지관리에서부터 활용시스템 구축, 증명서 발급절차 및 중국 통관정보 등 FTA 활용 준비를 위해 종합적인 상담과 안내를 해주었다.

지역공단에 위치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YES FTA 센터(상담버스)'를 마련하고, 전국의 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FTA 안내를 받지 못하던 총 362개 중소기업들에게도 맞춤형 상담을 해 주었다.

또한 FTA 활용 준비, 원산지증명, 상대국 검증 대비를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보급하고, 원산지증명서(C/O) 일괄(원스톱) 발급시스템 및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에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한-중 FTA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의 관심을 높이고자 'CEO 리포트' 발간, '신규 FTA 비즈니스 모델' 제공, '기업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관세청은 1단계 특별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작성해 상담에 활용하고, 한-중 FTA 발효시점에 맞춰 '2단계 100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5.06.25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상반기 중소기업 FTA활용률 상승과 비용 36억원 절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지난 1월 관세청에서 신설된 기업지원 전담조직)의 상반기 성과를 분석한 결과, FTA 종합 컨설팅 제공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59.1%(15.1월)에서 63.0%(15.5월)로 증가하였다. 또한, 통관애로 해소를 통해 약 36억 원의 중소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①중소기업 FTA·AEO 원스톱 컨설팅 지원, ②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③통관애로 맞춤형 해소 지원, ④한-중 FTA 100% 활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추진하였다.

센터 신설 직후, 업무계획 수립, 직원 역량강화 교육, 이동 상담버스 배치 등 기업지원 업무 기반을 신속히 정비하였고, 조직 신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5월말 기준) 현장 방문컨설팅(61건 → 344건), 통관애로 해소(51건 → 63건), 일자리 창출(3명 → 53명)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한-중 FTA 특별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총 12,943개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한-중 FTA 상담을 지원하였다.

특히, 세관 직원 및 공익관세사가 팀을 이루어 이동버스를 타고 영세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FTA+AEO+해외통관애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통관애로 해소와 관련, 지원센터 ↔ 관세청 ↔ 해외 관세관 ↔ 외국세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FTA 협정관세 배제 위기를 해결하는 등 63개 업체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며 약 36억 원의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역량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5.06.29

전국 특성화고·대학교 교원 대상 FTA 원산지 교육과정 개설

전국 특성화고 및 대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2차에 걸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천안소재)에서 'FTA 원산지관리 전문교육 연수과정'을 개설한다.

관세청은 앞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원산지관리" 분야를 신설했고, 무역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FTA 원산지관리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수는 교과과정 개편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FTA 원산지 관리 실무를 가르칠 수 있는 인적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고, 부산 교육청의 협조로 FTA원산지관리 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한다.

교과과정은 FTA개요부터 FTA법령, 원산지결정기준과 수출입통관실무 및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까지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실무중심으로 1일 7시간씩 진행되며 세관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www.fta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FTA전문인력 양성과 취업과 고용을 연계하여 일자리연결(잡매칭)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 등을 중심으로 FTA 취업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오는 9월 4일(금)에는 경제단체, 정부, 언론기관 간 협력사업인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도 참가하여 FTA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도 「FTA 원산지 전문교육 지도교사 연수」 참가 안내

구분	내용	
대상	특성화고교 FTA/무역/국제통상 등 경영/사무/제조업분야 교육 교사 * 전국 중등교사 중 연수지명번호를 부여 받은 교원 우선권 부여	
교육내용	FTA교육	FTA 협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국내이행법, FTA 관련 수출입통관 및 품목분류 등 FTA 활용실무 중심 교육
	전산실습	원산지관리시스템 이해 및 실습(FTA-PASS 활용)
	현장학습	평택세관 수출입통관현장 등 견학
교육일정	각 차수당 1일 7시간 (10:00~18:00), 35시간 교육(4박5일, 합숙)	
교육장소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시 병점 소재)	
교육문의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인재개발팀 • 전화 : 031-600-0743~4 • 이메일 : kioifita@origin.or.kr	

02 우리나라 FTA 동향*

2015.04.30

FTA 세부 추진 전략을 담은 '新FTA 추진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전략적 FTA 추진”의 일환으로, 향후 세부적 FTA 정책 방향을 담은 “新FTA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新FTA 추진 전략”은 2013년 6월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이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FTA 세부 추진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新FTA 추진 전략”은 중국, 일본 등 인접국들도 최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어, 기체결 FTA를 통해 구축된 FTA 플랫폼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후속조치이다.

新FTA 추진 전략은 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Mega)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 ② 기체결 FTA의 개선, ③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등 3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TPP·RCEP 등 메가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은 기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상황 및 우리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하여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新FTA 추진 전략 세부내용

구분	내용
① TPP·RCEP 등 메가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EU·中 등 3대 거대경제권과의 양자 FTA 체결 이후, TPP·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메가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 기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상황 및 우리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할 계획임
② 기체결 FTA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여타 기체결 FTA의 경우도 FTA 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속 모색할 계획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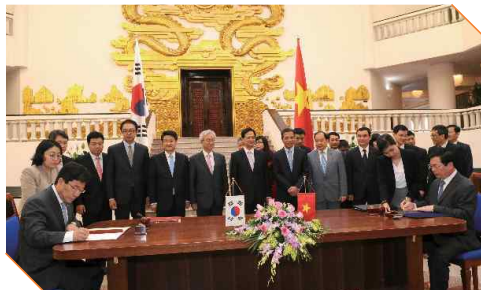
구분	내용
③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FTA 대상국은 경제적 지표(GDP·실행관세율·인구 등), 상대국의 통상정책, 국제 분업구조에서의 위치 및 국제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이에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 FTA 대상국은 권역별로 다음과 같음

2015.05.05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지난 5월 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FTA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인 한-베트남 FTA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한 성과다.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했다.



◀ 사진 : www.fta.go.kr 제공

한-베트남 FTA는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상생형·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의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 뿐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트남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윤상직 장관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2015.05.13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협상 개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수석대표협상이 지난 5월 12일(화)부터 13일까지(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은 왕 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일본측은 나가미네 아수마사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하였다.



◀ 사진 : www.fta.go.kr 제공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현재 7차례 실무협상까지 진행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SPS, 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5월 12일 열린 '한중일 FTA 제 7차 수석대표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저는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한중일 FTA의 진전이 RCEP 협상 추진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한중일 3국은 협상 진전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2015.05.14

기업 편의 증진을 위한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 논의

한-아세안 FTA 제12차 이행위원회가 관세·경제협력·투자 분야 등 여타 산하 이행기구와 함께 '15년 5월 12에서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발효 후 열 두번째 정기 위원회로서 양측은 한-아세안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다. 이행위원회에서는 아세안 6개국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년 1월 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로 차질없이 인하하도록 당부하는 등 주요 이행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통관) 규정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아세안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5.06.01

올해 통상정책 중심은 한-중FTA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 되면서 한중 수교 23년,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15년 6월 1일(월)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은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15년 2월 25일 가서명(initialing)을 거쳐 정식서명을 마무리하고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 사진 : www.fta.go.kr 제공

양국 통상장관은 서명식 계기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대(對) 한국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며,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이러한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5.06.04

정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각 FTA협정별 경제 효과 분석 결과

구분	실질GDP (발효 후 10년)	소비자후생 (발효 후 10년)	고용 (발효 후 10년)	세수 (발효 후 10년 평균)
한-중 FTA	0.96%	146억불	53.8천명	0.27조원
한-베 FTA	0.01%	1,46억불	671명	△267.4억원
한-뉴 FTA	0.03%	2,96억불	952명	△215.9억원

또한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국/한-베트남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2015.06.11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작업반

지난 6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 개최된 서울 무역협회에서 한국-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정에 따른 분야별* 이행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가 있었다.

*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화학물질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국-EU FTA 이행 작업반에서 양측은 분야별로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정책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째날(6월 10일) 개최된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對)EU 시장 진출 접근성 제고를 위해 EU의 관련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제기하고 해소를 요청했다.

둘째날(6월 11일) 개최된 화학물질 작업반에서는 최근 시행된 우리나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5.1.1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EU의 화학물질 관련 제도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같은날 개최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는 원료의약품의 EU 수출시 필요한 서면확인서 제출 면제(화이트 리스트 국가 등재 신청) 관련 EU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산 의료기기의 EU 진출시 필요한 인증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의약품·의료기기 적합인증표시(GMP)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하여 EU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015.06.19

중미 6개국과 상생형 FTA 협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지난 6월 18일 오후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중미¹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무역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우리나라 200여개 기업이 현지에 투자와 진출해 15만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교역과 투자가 정체 상태를 보여 교역 품목과 투자 분야를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미지역의 다양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할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1) 중미는 SECA(중미경제통합기구)에 소속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의미하고, 이들 6개국은 경제적 공동체인 SECA(중미경제통합기구)를 결성하는 등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음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윤장관과 중미 통상장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중미간의 교역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이 그간 공적개발 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전개한 중미지역 상수도, 전력망, 태양광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을 기반으로 상생형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했다.

비록 현재의 한국과 중미 6개국간 교역규모는 50억불 수준('14년)으로 크지 않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인 반면, 중미의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 열대과일, 금속 등으로 양측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상생(win-win)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미 6개국은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미주와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중미 지역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통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잠재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들의 중미지역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사진 : www.fta.go.kr 제공

2015.06.25

한국의 TPP 가입, 무역업계 60% 이상이 '찬성'

지난 6월 24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의 TPA(무역촉진권한) 승인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의 TPP 가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2%가 대체로 가입에 찬성하며, 특히 농수산물, 전자전기, 생활용품 분야 중소기업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PP를 통한 일본 시장에 대한 개방은 일부 민감 분야에서 국내 시장 잠식의 우려가 제기되어 우리의 중장기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업계의 TPP 참여에 대한 인지도와 의견 및 향후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TPP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기업이 42.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TPP 참여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62.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FTA 미체결국이자 우리와 무역비중이 큰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역업계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12개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 확대와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되어 스파게티볼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일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TPP 가입에 따른 손익은 '이익이 크거나 이익과 손해가 대등하다'는 답변이 85.6%를 차지했다.

03 해외 FTA 관련 동향*

2015.05.29

EEU, 베트남과 FTA 체결

베트남과의 FTA는 올해 초 공식 출범한 EEU가 역외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정은 서명국 의회의 비준 절차가 끝나고 2개월이 경과한 뒤 발효한다.

협정에 따라 서명국 간 교역 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59%는 협정 발효 즉시, 29%는 5~10년 내에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날 서비스 시장 진출 간소화에도 합의했으며 EEU의 다른 국가들도 조만간 러시아의 선례를 따를 계획이다.

유럽연합(EU)에 맞서 러시아 주도로 창설된 옛소련권 경제공동체인 E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이 지난해 5월 창설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 본격 출범했다. 뒤이어 지난해 10월 가입 협정에 서명한 아르메니아가 올해 초 EEU에 가세했고 지난해 12월 협정을 체결한 키르기스스탄이 가입 절차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2015.06.17

중국-호주 FTA 정식 체결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과 앤드루 롱 호주 통상장관이 지난 6월 17일 호주 캔버라에서 각기 양국 정부를 대표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으며, 이는 '05년 4월 협상 개시 이후 10년 만의 결실이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에는 화물, 서비스, 투자 등 10여개 영역이 포괄되어 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호주는 주력 수출품인 농·축산물, 와인, 유제품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연간 19조원의 수출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화물 분야에서 생방이 각자 수출무역액의 85.4%를 차지하는 제품은 협정 발효시 즉시 무관세를 실현하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전자 제품에 적용되는 5%의 관세가 사라지는 등 경제적 이익과 함께 한국과 아세안(ASEAN)을 넘어 태평양을 향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또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자료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한편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지난해 두 나라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 규모는 1천600억 호주달러(138조원)를 넘어선 바 있다. 중국-호주 FTA는 연내 발효될 예정이다.

2015.06.18

인도,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추진 합의

러시아에서 인도 통상장관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의 통상장관이 자유무역 협정(FTA) 추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FTA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FTA 협상 개시 전까지 7개월간의 공동연구 진행예정이며, EEC 통상장관은 이란과도 FTA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EU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옛 소련권 중심 경제공동체로 유럽연합(EU)에 맞서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 회원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4개국이고 키르기스스탄이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2015.06.25

TPP 협상 동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불가결한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에 서명했다. '15년 6월 24일 TPA*가 미 상원을 통과한 후 6월 25일 TAA**법안도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29일 최종으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의회가 통상 교섭 권한을 대통령에 일임하는 TPA 법안이 성립돼 TPP 교섭은 타결 쪽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TPP 참여국들은 연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상품 협상의 핵심은 미·일의 양자 협상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TPP 협상 마무리 후, 12개국 각료 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참가국 간 가교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TPP 정부대책본부는 지난 6월 30일, 자민당 회의에서 TPP의 협정문 21개 분야 중 지적 재산 및 투자 등 4개 분야가 계속해서 과제로 남아 각료급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rade Promotion Authority(무역촉진권한) :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협상 권리를 부여하며 의회는 가·부결 권리만 부여되고 수정권한 없음

**Trade Assistance Administration(무역조정지원제도) : TPP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미국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령

2015.06.25

「일본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출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 이일형)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 일본 기업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기체결한 FTA와 현재 협상 진행 중인 TPP 및 EU와의 FTA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의 TPP 협상 및 제반 FTA 추진에 유용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이는 향후 TPP 참여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이라고 언급했다.

2015.06.29

중국의 FTA 체결 및 추진 동향

중국은 현재까지 13개 FTA를 체결·10개 FTA가 협상 또는 추진 중인 가운데, 체결한 FTA 중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하였다.

'15년 6월 17일 정식 서명한 호주와의 FTA를 포함하여 아세안 10개국·파키스탄·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페루·홍콩·마카오·코스타리카·아이슬란드·스위스·한국 등과 13개 FTA(총 22개 국가)이다.

한편, GCC(걸프협력회의), 노르웨이, 한중일, RCEP, 스리랑카 등 5개 FTA를 협상중이며, 인도, 콜롬비아, 몰디브, 그루지아, 몰도바 등 5개 FTA도 추가로 추진 중이다.